

주요 업무 보고

202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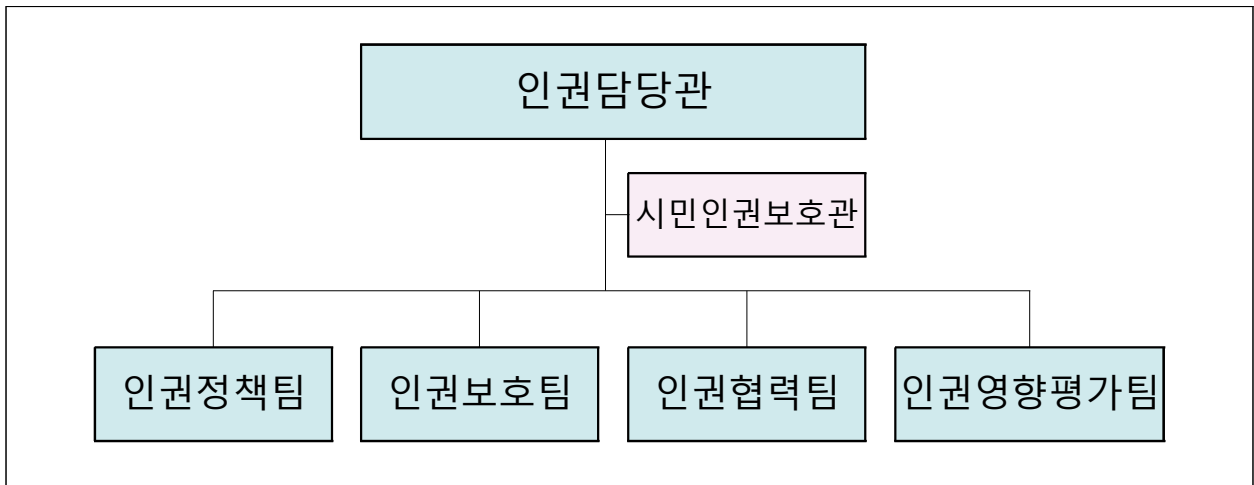
인권담당관

1. 일반 현황

1 조직 및 인력 1담당관 4팀

□ 조 직

(’21. 2. 28. 기준)



□ 인 력(현원/정원)

(’21. 2. 28. 기준)

구 분	계	행 정							관리 운영	임기제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5급	6급
정 원	22	17	1	3	6	7	-	-	-	5	4	1
현 원	20	15	1	3	5	6	-	-	-	5	4	1
증 감	△2	△2	-	-	△1	△1	-	-	-	-	-	-

※ 별도정원 1명 : 행정6급 1명(가사휴직)

2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년 예산현액	'21년 예산현액	집행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 계	1,562,480	1,356,653	299,032	393,746	274,194	389,681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227,300	175,693	47,265	45,223	40,223	42,982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68,200	60,100	11,150	21,000	15,150	12,800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52,560	52,560	21,140	11,640	8,640	11,140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389,588	388,788	7,500	127,910	67,500	185,878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129,000	62,800	28,000	2,000	16,400	16,400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184,000	157,200	-	135,800	3,600	17,800
인권 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67,650	54,720	53,984	-	368	368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32,000	152,000	107,000	-	45,000	-
서울인권 콘퍼런스	271,600	111,280	-	1,000	55,140	55,140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17,820	17,820	8,820	3,000	3,000	3,000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70,000	67,000	-	32,000	5,000	30,000
기본경비	52,762	56,692	14,173	14,173	14,173	14,173

3 팀별 주요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인 권 정 책 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평가 ◦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 조례, 규칙 등 법·제도 개선 ◦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선 권고사항 관리 ◦ 서울시 인권정책회의 운영 ◦ 서울시민 인권보고서 발간 ◦ 서울 인권 콘퍼런스 개최, 인권문화행사 개최 ◦ 사회적 소수자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개발 ◦ 인권정책 홍보 및 청년 인권문화행사 추진 ◦ 인사, 조직, 국회, 시의회, 예산, 회계 등 사무업무
인 권 보 호 팀 (시민인권보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시민인권보호관) 운영 ◦ 시 관련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상담, 사건 통계 관리 ◦ 인권침해사항 조사(지원) 및 권고이행 관리 ◦ 2차 피해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 활동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 주거시설 등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적용 전파 및 점검 ◦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 인권무료법률 상담 운영 ◦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 지자체 및 인권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인 권 협 력 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서울 인권 아카데미 운영 ◦ 인권현장 발굴 및 표석화(바닥동판) 사업 ◦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 ◦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 인권교육 표준강의안 개발 및 활용 ◦ 인권교육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운영 ◦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사업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관리
인 권 영 향 평 가 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자치법규, 건축시설물, 정책·사업) ◦ 인권영향평가 사후관리 및 제도적 안정화 추진 ◦ 인권영향평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지표 개발 ◦ 서울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이행사항 지도점검

II .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인권특별시 서울』 기반 강화 및 안정적 추진
.....
2. 인권침해 조사·구제 및 예방활동 강화
.....
3. 인권교육 및 시민 인권증진 활동 지원
.....
4.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및 공공기관 인권경영 추진
.....
5. 인권존중문화 확산 및 국내외 교류·협력 네트워크 강화
.....

1

『인권특별시 서울』 기반 강화 및 안정적 추진

- ◆ 인권적 관점의 정책 개선 활성화로 인권 친화적 행정 환경 지속 조성
- ◆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으로 시민이 행복한 「포용도시 서울」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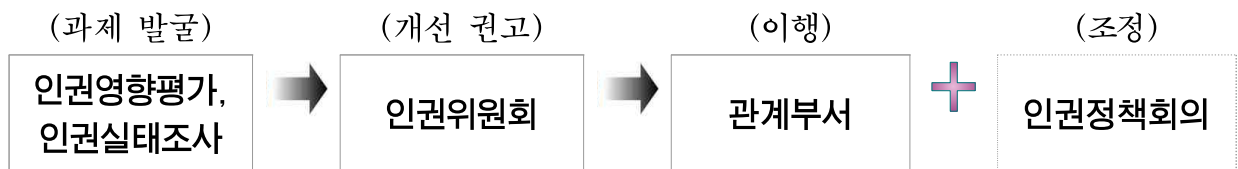
□ 추진방향

-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서울시정 자문 및 비(非)인권적 정책 개선 권고 활성화
-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평가를 통한 3차 기본계획 수립 준비

□ 추진계획

① 서울시 인권위원회 정책 개선 권고 활성화

-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강화
 - 인권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2명)으로 자문분야 확대 및 전문성 강화(5월)
 - 인권포럼 및 간담회를 통한 다양한 인권 이슈 공론화 및 대응방안 도출
 - 국가인권위원회 및 광역단위 인권개선 권고를 위한 TF 등 연대 강화
- 비(非)인권적 정책 개선과정 체계화로 과제 발굴 및 이행력 강화



- 인권영향평가, 인권실태조사 기반 비(非)인권적 개선과제 발굴
- 권고 대상 부서의 불수용에 대한 시장 주재 인권정책회의 상정·조정으로 이행을 향상

②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사업성과 제고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안정적 실행

- 2021년 인권정책 시행계획(100개 사업) 수립 및 환류(3월)
- 인권현안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23~'27년)을 위한 사전 준비 철저

- 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차 기본계획 평가 용역 시행(4월)
- 정량 및 정성평가 병행, 설문조사, 현장점검 및 FGI 등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60,100	11,150	21,000	15,150	12,800
		회의 등	회의, 포럼 등	회의 등	회의 등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67,200	0	53,800	3,600	9,800
		조사분야 결정	입찰공고, 용역업체선정	실태조사	관련 토론회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평가)	90,000	0	82,000	0	8,000
		계획수립	입찰공고, 용역업체선정	모니터링	인권정책회의

2

인권침해 조사·구제 및 예방활동 강화

-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안정화로 구제의 효과성 제고
- ◆ 인권지킴이단 운영 등 내실화로 시 인권보호 체계의 시민 체감도 제고

□ 추진방향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활동 및 권고이행 관리 강화
- 배심원제, 인권지킴이단 등 시민참여 확대 및 현장 인권보호 활동 강화

□ 추진계획

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및 시민인권보호관제도 운영 내실화

- 구제위원회(10명) 기능 및 후속조치 강화로 구제의 실효성, 완결성 제고
 - 직무범위 및 조사 가능 시점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개정 추진(6월)
 - ▶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 “법인·단체” 추가
 - ▶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업무수행 종료 이후에도 조사·시정권고 기능토록 규정 신설
 - 조사활동 시점부터 피해자 보호 및 부서(기관) 조치로 2차 피해 예방 강화
 - 권고 이행 회피, 기피 부서에 대한 설명 및 이행 방법 지도 강화
-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3명) 홍보 활성화로 인권침해 예방 활동 강화
 - 사건 발생 추이 고려 민간위탁기관 집중 홍보(구제 제도, 인권침해사례 등)

② 시민인권배심회의 운영 강화로 시민체감도 제고

- 회의 주제 선정 다변화로 내실있는 시민참여 보장
 - 조사 중 사건으로 제한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다양한 인권문제로 확대
- 풍부한 논의 환경 조성으로 배심원들의 만족도 제고
 - 안건 보충자료 등 의제 지원 강화, 안건에 적합한 전문가 배심원 선정

③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및 제도 개선

- 시·자치구·서울시지방변호사회와 협력으로 인권침해 감시 강화
 - 1개조 4명으로 구성하되, 폭력 등 긴장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은 인원 확대 운영
 - 인권지킴이단 TF활동 정례화(월1회) 통해 철거 관련법 개정안 논의 참여
- 인권지킴이단 활동 역량 강화 및 국가기관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
 - 인권지킴이단 활동 사례집 제작 및 교육훈련 통해 현장 활동력 및 중재력 강화
 - 법원행정처, 국가인권위, 경찰청 등과 협력관계 구축으로 법·제도 개선 추진

④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확대

-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지원 확대 : 1개 단체(3천만원) → 3~5개 단체(1억 5천만원)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분야 확대
 - 기존 의료비 지원 위주 사업에서 상담 및 법률구조, 경제적 지원 등 다양화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시민인권침해구제 위원회 운영	52,560	21,140	11,640	8,640	11,140
		위원회 운영,매뉴얼 및 결정례집,배심회의,협력 사업 등	위원회 운영, 배심회의,협력사업 등	위원회 운영,배심회의	위원회 운영, 배심회의,협력사업 등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17,820	8,820	3,000	3,000	3,000
		지킴 교육 등	지킴이단 운영 등	지킴이단 운영 등	지킴이단 운영 등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152,000	107,000	-	45,000	-
		보조금심의위원회,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	최종평가 및 정산

3

인권교육 및 시민 인권증진 활동 지원

- ◆ 시 직원 대상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가치 전파 및 「행정의 인권화」 실현
- ◆ 시민대상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등 운영으로 시민 인권감수성 향상

□ 추진방향

- 시 본청·산하 기관 전 직원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이수
- 인권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민간단체에 인권교육·연구 등 사업비 지원
-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를 통해 역사현장 보존, 생활 속 인권공간 조성

□ 추진계획

① 전 직원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행정 구현 및 시민인권 증진 도모

- 인권아카데미(44,055명) : 시 및 투자·출연기관 모든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 교육모니터링 : 전문가평가단(13회), 설문조사(850명) 등을 통한 교육 개선사항 발굴
- 강사양성(40명) : 인권교육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인적기반 구축
- 콘텐츠 개발 : 서울시 특색을 반영한 독자적인 인권교육용 콘텐츠 제작

② 민간단체의 인권사업 지원을 통해 시민의 인권보호·증진

-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분야 시민단체의 전문성 활용
 - －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인권교육 등 지원
- 공모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권분야 관련 단체 지원
 - － 민간단체 대상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 후 사업비 지원(150백만원)

③ 생활 속 인권현장 체험을 위한 바닥동판 설치 및 탐방프로그램 운영

○ 잊혀가는 인권현장의 역사성, 상징성 회복 공간 조성

－ 인권현장 바닥동판(표지석) 설치 : 2개소('20.12월 기준, 58개소 설치)

※ 인권현장 추가 선정 시 바닥동판 확대 설치·운영

○ 시민, 학생 등 대상 테마별 탐방프로그램 운영 (4개 주제, 7개 코스) : 50회, 1,300명

－ 민주화(4월길, 6월길), 남산(자유길), 사회연대(여성길, 시민길), 노동(전태일길, 구로길)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탐방 횟수, 인원, 코스 조정 등을 통해 탄력적 운영

－ 온라인(비대면) 인권 현장 탐방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 구축

※ 탐방 영상 추가 제작(2편) 및 다양한 온라인 채널(시 유튜브 채널 등) 활용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388,788	7,500 연간운영계획수립	127,910 인권교육 및 모니터링 (용역착수)	67,500 강사양성 및 콘텐츠개발 (용역진행)	185,878 인권교육 등 (용역준공)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175,693	47,265 단체 선정 및 사업비지원 등	45,223 사업비지원 등	40,223 중간점검(7월) 사업비지원 등	42,982 사업평가 등
인권현장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54,720	53,984 현장탐방 운영업체 선정 및 바닥동판 유지·보수	- 현장탐방 운영	368 현장탐방 운영 및 바닥동판 설치	368 현장탐방 준공

- ◆ 인권 친화적 관점에서 市 정책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행정의 인권감수성 제고
- ◆ 市 산하 공공기관 대상 인권 존중 경영문화 정착

□ 추진방향

- (인권영향평가) 자치법규, 건축·시설물 및 정책·사업으로 지속 확대
- (인권경영) 지도점검 및 평가체계 개선으로 공공기관 인권경영 강화

□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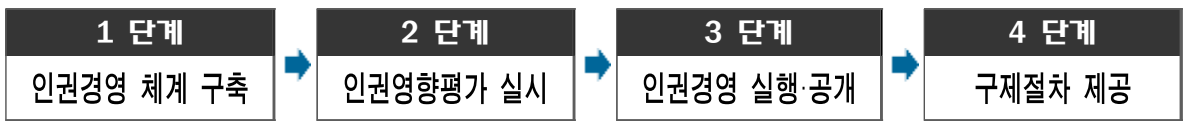
① 「인권영향평가」 지속 확대 추진

- 자치법규 : 입법예고 기간 중 사전평가 실시
 - － (1차) 인권담당관 (2차)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3차) 市 인권위원회
- 건축·시설물 : 점검표에 따라 사후 평가 시범 실시, 점검표 지속 보완
 - － 2개 분야(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등) 10개 건축물 평가 후 개선사항 도출
- 정책·사업 : 지침편람 인권영향평가 후속 조치 및 재해·재난 분야 평가 실시
 - － 지침·편람 개선 권고(33개) 및 우수사례(47개) 기관 전파
 - － 사회재난·자연재해 관련 市 조례, 지침 및 사업 등을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단계별 취약점(사고 예방, 복구 노력 등) 평가 후 개선 과제 도출
 - ▶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재난·안전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안전취약계층 지원) 및 이와 관련된 지침·사업

② 공공기관 인권경영 강화 추진

○ 출연기관 인권경영평가 배점 및 평가영역 확대 개선

- 배점 확대 : 1점('20년) ⇨ 2점('21년)
- 평가영역 확대 및 개선
 - ▶ 1단계('20년) + 2,3,4단계('21년)



- ▶ 기관장 인권교육 실적 반영(미이수시 감점 0.1점)

○ 인권경영 이행사항 지도점검 강화 : 시 산하 공기업·출연기관(26개)

- 평가방식 :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 평가 병행 실시
- 1차 서면평가 결과 이행이 저조한 기관에 대하여 2차 현장점검 추진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67,000	-	32,000	5,000	30,000
		개정 권고	제안서평가, 용역계약	자문회의 개최	준공금 지급

5

인권존중문화 확산 및 국내외 교류협력 네트워크 강화

- ◆ 국내외 인권주체 간 교류·협력 증진으로 글로컬(Glocal) 인권도시 구현
- ◆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분위기 확산을 통해 보편적 인권의 가치 실현

□ 추진방향

- 인권 콘퍼런스, 문화행사 개최로 인권가치의 시민사회 확산 및 인권감수성 제고
- 국내외 인권 이슈 등 공유를 위한 '인권의 장' 마련으로 협치 네트워크 강화
- 지자체 간 인권행정 공유 및 인권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으로 상호 발전 도모

□ 추진계획

① 서울 인권 콘퍼런스 개최(12월)

- 다양한 인권 거버넌스 주체 참여(4개 세션, 400여명)
 - 국내외 지방정부 인권 거버넌스 관계자 및 관심 있는 시민 등
 - 시의성 있는 현안 등 다양한 인권문제를 다루어 시민사회 참여 강화
- 지방정부 인권행정 발전방안 마련 및 국내외 지속적 교류·협력체계 구축
 - 지방정부 인권 거버넌스 간 공통문제와 국제 인권 이슈·사례 논의
 - 국내외 인권단체 전문가 섭외로 국제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

② 다양한 인권문화행사 개최(연 1회)

-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2021 인권문화행사」 개최(12월)
 - 세계인권선언일(12.10)을 기념하고 서울 인권 콘퍼런스와 연계한 다양한 인권문화행사(인권전시, 토크콘서트, 인권뮤지컬 등) 개최
 - 행사기간 전·후 「2021 서울 인권주간」 운영으로 인권 존중 문화 확산

③ 서울시 인권정책에 대한 대시민 인식 제고

- 인권정책 홍보를 위한 「2019-2020 서울시민 인권보고서」 발간(7월)
 - 서울시 인권정책 등을 알기 쉽게 알리기 위해 우수사례 수록
 - 최근 2년간 사회이슈를 인권 관점에서 바라보고 기록한 보고서 제작
- 서울시 인권행정을 소개하는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홍보
 - 콘퍼런스 등 인권행사, 인권단체 간담회 및 공무원·시민 인권교육 시 활용
 - 서울시 인권침해 상담·신고 안내를 위한 리플릿 제작·배포(3,000부)

④ 지방자치단체 및 인권단체와의 협력체계 강화(연중)

- 지방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 증진
 - (광역) 광역지자체 인권네트워크 회의 개최(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사례 등) : 9월
 -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워크숍 개최, 인권도시 네트워크 회의 출범식 개최: 4월
 - 인권단체와의 협력체계 강화
 - 코로나19 정보인권보호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인권단체, 전문가 TF 운영
 - 인권단체와 상시적 교류 및 비상시 인권현안 대응을 위한 핫라인 운영
- ※ 코로나19 성소수자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운영('20년)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울 인권 콘퍼런스	111,280	-	1,000	55,140	55,140
		-	기획회의 운영	행사준비 (용역착수)	행사개최 (용역준공)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62,800	28,000	2,000	16,400	16,400
		인권보고서 제작	홍보자료 제작	인권문화행사 (용역착수)	인권문화행사 (용역준공)

목
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202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인권담당관

□ 총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8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 중	검토 중	미반영
계	계	8	2	5	1	-
	시정· 처리요구사항	6	1	4	1	-
	건의 사항	2	1	1	-	-
	기타(자료제출 등)	-	-	-	-	-

시정 · 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인권교육은 조례상 의무교육인 만큼 성과목표를 기존 수치인 60%보다 상향 조정이 필요함. (인권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 중심의 교육효과성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 산정방식 개선 - 인권교육 운영 횟수 → 인권교육 이수율 ○ 매년 교육결과를 토대로 그 다음해 성과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전 직원들이 인권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인권아카데미 추진계획 수립: '21년 1~2월 ○ 2021년 인권아카데미 업체선정 계획 수립: '21년 1~2월
<p>○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위험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크며, 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 인권지킴이단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함으로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시켜 안전보호장치를 마련해 주길 바람 (인권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구성은 공무원 3, 변호사 1명임. ○ 공무원들은 시 단체보험(생명/상해)에 가입되어 있음 ○ 변호사의 경우 2017년 이후 보험가입을 재추진하였으나, 단체보험의 경우 일정한 급여가 없는 2종 단체인 점, 가입 규모 미달인 점 등의 이유로 가입 불가 통보를 받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현장에서 과도하게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일 경우 집행인력(법원 집행부, 철거업체, 경비용역 등) 및 경찰 측에서 현장 통제 ○ 현장 통제 및 상황에 따라 안전에 유의하며,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기보다 집행관에게 협조 요청하여 활동할 것 등을 활동원칙으로 명시적 전달(지침교육, 활동전 공지 등) 하여 인권지킴이단 구성원들이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겠음 <p>※ 인권지킴이단 4년간 활동 중 상해사건 발생 사례 없음</p>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인권정책회의가 조례에 1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또한 정책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없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점은 조례 위반임. 회피성 답변보다는 인권 관련 안건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요함 (인권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조례 상 인권정책회의 운영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인권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극 개최하겠음.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제7조의2(서울시인권정책회의) ①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서울시인권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p> </div>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정책회의 개최 : '21. 10월
<p>○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권과 의결권을 동시에 가지는 구조적 문제 개선·보완하기 바람. (인권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운영 초기('12.9.)에는 인권 옴부즈 퍼슨으로서 조사 및 결정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독립제로 운영되었음. ○ 이후 인권침해 사건의 다양화, 복잡화 등 전문적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전문성, 결정의 신뢰성 강화 목적으로 시민인권침해위원회를 설치(2016. 9.)하여 기존의 시민인권보호관은 위원회 위원 신분으로 변경된 것으로 옴부즈퍼슨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동일하게 하고 있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같이 위원회의 위원이 조사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례도 다수 있고 ○ 현재, 위원회 운영상 사건 설명 및 의견 제시 등 원활한 소통에 유리한 면도 있어 향후 어느 방식이 위원회의 효율적, 공정한 운영에 이로울지 검토하여 보완해 나가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인권무료법률상담에 있어 상담인력 운용 및 상담 처리에 대한 관리 미흡. 인권무료법률상담 변호사가 2014년 이후 크게 변동이 없고 변호사가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도 보완사항이 없음. 또한, 상담 유형 관리 및 만족도 조사 등 상담 처리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와 적극적인 서비스 지원이 요망됨. (인권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법률상담 변호사(현 7인) 대상 활동여부를 점검한 바, 5인이 지속 활동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혀와 참여 독려 완료 ○ 상담 만족도 조사 관련 방문상담 재개시 만족도 조사 시행하여 특이사항 있는 경우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인권담당관에 즉각 통보 협의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시정활동 지원 신청: '21.3월 ○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추천 기간 도래하면 인권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추가 추천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추가위촉 있을시 법률지원담당관과 협의하여 변호사 추천 → 인권무료법률상담 전문변호사로 위촉 ○ 인권침해상담전문가 채용검토 및 상담수행인력 확대, 자체교육을 통하여 증가하는 인권 법률 상담 수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인권무료법률상담은 인권침해신고 주창구가 아님. 그야말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되는 것임. 인권보호팀에서 20년 한해 850건, '13년 이후 '20년까지 총 2,789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p>○ 인권법률상담 변호사 8명중 1명은 스스로 포기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보완사항이 없음 보완하기 바람. 다른 변호인단도 2014년 이후 변경이 거의 없음. 시민들의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닌 홍보도 없고 사업자체가 정체되어 있음. (인권담당관)</p>	

건의 사항

건의 사항	조치 결과
<p>○ 인권경영 평가 대상기관 지도점검 철저하게 하기 바람. (인권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 공공기관 인권경영 이행현황 점검 : 4회('19년 ~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이행사항 지도·점검('19. 7월) - 市 출연기관 인권경영 평가('20. 3월) - 市 공공기관 인권경영 1차 지도점검('20. 6월) - 市 공공기관 인권경영 2차 지도점검('20. 8.~9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컨설팅(필요시) 제공 : '21. 1 ~ 12월 ○ 출연기관 인권경영 평가 : '21. 3 ~ 4월 ○ 공공기관 인권경영 점검계획 수립 : '21. 5월 ○ 공공기관 인권경영 지도·점검(1차, 서면 평가) : '21. 6 ~ 7월 ○ 공공기관 인권경영 지도·점검(2차, 현장 점검) : '21. 8 ~ 9월 ○ 인권경영 관련 인권교육(인권이카데미) 실시 : '21. 6 ~ 12월
<p>○ 공무원 호봉산정 관련 권고처럼 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인권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함에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고하고 이행하도록 관리하고 있음. ○ 공무원 관련 주요 제도 개선 권고 및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사업장 출신자에 대한 경력인정 차별 : 이행 완료 - 시간선택제 임기제 경력인정 차별 : 이행 완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에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권고하고 이행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음.